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수진작 효과 가시화

프랜차이즈·편의점 등 매출 상승

맘스터치 등 외식업계 매출 상승
편의점, 김치·간편식 등 구입 ↑
4050 세대, 정부정책 신뢰 상승
50대 65% “세금 돌려받는 느낌”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입 일주일 만에 가시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내고 있다. 실제 프랜차이즈 치킨과 피자 등 외식 브랜드의 매출이 반등했고, 편의점에서는 김치, 도시락, 음료 등 생필품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총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들어갔다.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15만~50만원이 차등 지급되며, 내수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쿠폰 지급 첫 주부터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매출 상승 효과를 확인했다. bhc를 운영하는 다이닝브랜드그룹에 따르면, 22일부터 27일까지 매출이 평소보다 약 10%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주문 건수는 12% 늘었다. 맘스터치는 공공배달앱 '뽕겨요'와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매출이 전주 대비 51% 급증했다. 이밖에 맥도날드·롯데리아·노브랜드버거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 역시 매출이 5~20% 늘었다.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 대형마트·백화점 대신 접근성이 뛰어난 편의점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이들이 늘면서 고기, 간편식, 생필품, 쌀 등 장보기 품목의 매출이 늘었다. 객단가도 상승했다. GS25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치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93.7% 폭증했고, 과일(62%), 간편식(20.6%), 가공식품(24.0%) 등 전반적인 생활밀착형 품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목의 매출이 큰 폭으로 뛰었다. CU도 김치(26%), 간편식(23.8%), 음료(44.6%) 등 대부분 주요 품목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편의점들은 소비쿠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 행사 상품을 늘리거나 신선식품 비중을 늘리고, 사용처 안내 문구를 부착해 고객 유입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소비 진작 흐름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쿠폰 활용 의향이 높은 항목은 외식 및 음료(70.0%), 식료품(63.7%), 생활용품(50.0%)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이었다. 응답자의 과반(51.0%)은 소비쿠폰을 '생활비 절약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활품과 특별소비를 병행'하겠다는 의견은 25.8%, '고급 외식 등 특별 소비'에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정책 체감 효과는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졌다. 50대 응답자의 64.5%는 “세금을 돌려받는 느낌이 든다”고 응답했고, 53.5%는 “이런 정책이 있는 나라에 살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 역시 4050 세대를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당분간 내수진작에 긍정적 효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시적인 소비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재정 지속성과 정책 설계의 정교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여름철 외식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가맹점 운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만족은 물론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원신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6월 소비, 4개월 만에 증가 전환 산업생산 늘고 투자 부진은 지속

반도체·차 생산 증가, 설비투자 감소
건설업체 실적 반등, 수출 부진 여전

지난 6월 소비가 4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해 이후 부진을 거듭해 온 소비가 하반기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산업생산도 4~5월 두 달 연속 감소한 이후 늘었다. 설비투자는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는 반등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소비)가 전월과 비교해 0.5% 늘었다. 3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6월 달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준내구재(4.1%)와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증가했는데 품목별로 가전제품, 가구, 화장품, 음식료품 등이 전체 소비의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승용차·통신키기, 컴퓨터, 차량연료, 의약품 등은 감소했다.

최장용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소비 심리가 지난달과 이번 달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소비쿠폰이나 정책 향방을 지켜봐야 하지만 증가 전환이란 측면

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2% 증가했다. 4월과 5월 감소 이후 반등이다. 반도체(6.6%), 자동차(4.2%), 금속가공(4.7%) 등에서 생산이 늘어났다. 반면 전자부품(-18.9%), 기계장비(-1.8%), 기타운송장비(-2.2%)는 줄었다.

제조업 출하는 전달보다 1.8% 늘었다. 내수 출하(2.0%)와 수출 출하(1.5%)가 함께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에 비해 3.7% 감소하며 4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7%)에서 투자가 증가했으나 운송장비 투자가 14.8% 급감했다.

다만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6.7% 늘었다.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에 증가 전환이다. 건축공사 실적이 10.3% 늘며 반등을 견인했다. 토목공사 실적은 2.8% 감소했다.

그러나 선행지표 성격인 건설수주가 '전년동월 대비'로 13.6% 감소하면서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종은기자 sejong@

모건스탠리 “내년 초 이후 금리인하 예상”

» 1면 '美 연준, 금리 동결...'서 계속

이들은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고 고금리가 유지될 경우 고용 시장이 곧 약화될 수 있다”며 금리인하를 지지했다.

시장에서는 취업자수 증가보다 실업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야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BNP파리바는 “파월 의장은 현재 통화정책이 경제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취업자수 증가보다는 실업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야 금리인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DB도 “9월 인하를 위해서는 실업률

등 고용지표의 추가적인 악화가 필요하다”며 “파월이 고용증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노동공급과 함께 축소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볼 때 연준이 단지 고용자수 증가폭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금리인하는 내년 초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MS)는 “파월 의장은 관세의 영향이 인플레이션에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정책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준이 올해 금리를 동결하고,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초 이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법인세수 늘리고, 서민 소득세 부담 줄인다

이재명 정부 1호 세법개정안
법인세수 2년 내 4조5000억 ↑
과세표준 3000억 이상 25%

법인세수 비중을 다시 늘리고 중산층·서민의 소득세 부담은 덜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의 발효 시 법인세수가 향후 2년간 약 4조5000억 원 증가한다. 이에 반해 소득세수는 2000억 원가량 줄어든다.

또 주식 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지는 데 반해, 대주주 기준은 부유금액 기준으로 더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율을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놨다.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3000억 원 이상은 2022년 수준인 25% 적용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동안은 24%였다. 이어 200억 원 이상~3000억 원 미만은 22%로, 2억 원~200억 원은 20%로, 2억 원 미만은 10%로 환원한다. 지난 3년간 각

각 21%, 19%, 9%를 적용받아 왔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 부담은 경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한다. 다만,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상향이다. 또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담겼다.

교육비 부담도 완화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한다. 아울러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 요건을 폐지한다.

주거비 부담의 완화도 담겼다. 근무 목적으로 주거를 달리는 부부를 대상으로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부부합산으로 연 1000만 원 한도

다. 그간 세대주 1인만 공제가 가능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늘린다.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시 세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대비 '50% 이상 감소'가 '20% 이상 감소'로 개정을 추진한다.

주식 양도 시에 붙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복구한다. 코스피가 0.05%, 코스닥이 0.2%로 오른다. 코스피의 경우 2024년 0.03%, 2025년 0%를 적용받았다. 코스닥은 각각 0.18%, 0.15%였다.

또 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이를 통해 법인세수가 2026년에 전년 대비 2227억 원, 2027년에는 4조3588억 원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반면 소득세수는 2년간 2296억 원 줄어든 것으로 봤다.

/서종은기자 sejong@

올 실적 '상저하고'... AI·로봇 중심 성장세

» 1면 '삼성전자 2분기 실적...'서 계속

삼성전자는 올해 실적이 '상저하고'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AI와 로봇 산업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산하며 IT 시장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실적 악화 주범으로 꼽혔던 반도체 부문이 2분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실적 회복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준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당초 2분기 여러 불확실성으로 메모리 시장을 보수적으로 전망했었지만, 업계 내 GPU(그래픽처리장치) 공급 개선이 가시화되며 AI 수요가 본격 늘어나기

시작했고, 중반부터 업황 개선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제품 판매 확대와 전장 매출 증대를 통해 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메모리는 D램의 경우 HBM, 고용량 DDR5, LPDDR5x, 24Gb GDDR7 등으로 AI 서버용 제품 수요 강세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낸드는 8세대 V낸드 전환을 가속하면서 서버 수요에 대응해 고용량, 고성능 D램·서버용저장장치(SSD) 판매를 확대할 전략이다. 파운드리에는 GAA 2나노 공정을 적용한 모바일 신제품 양산을 본격화하고 주요 거래선 판매 확대를 통해 가동률 향상과 수익성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현정 기자 hyeon@